

월요광장

‘순수한 마음’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들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순수한 마음, 전에는 이 말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이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평생 만날 일 없는 생면부지의 몇 사람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끝이 나는 일이 계속되면서부터다. 이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알려진 인물은 국정예 총행무진으로 개입하고 외동딸 성적을 위해서는 전 통 있는 한 대학을 통으로 사유화하는 괴력을 보였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심도 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에서 잠깐 동안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껏 들었던 ‘순수한 마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국정을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 수 있는가?

문제의 회장님 또한 국정의 구석구석

을 자기 집 살림하듯이 휘저은 이유가 오랜 친분 관계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며 모두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이 또한 사심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돕자고 한 일이라는 의미다. 순수라는 것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으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대로 쓰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의 개그가 되었다.

순수함이 구체적인 행위가 되면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다. 행위는 책임을 묻고 책임은 율음과 그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가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철학자는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모습으로 행해진다고 했다.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현대 철학자라고 불리는 하이데거와 아스파스에게서 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유대인인 아렌트는 독일의 교수가 될 수 없었다.

미국으로 망명한 아렌트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열린 전범자 법정에서 600만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으로 악명 높았던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관했다. 이 경험으로부터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나왔다. 악의 평범성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평범하

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아이히만은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고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한 웃음까지 지어 보이며 자신이 열심히 명령에 복종한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그에게 세상의 변화를 위한 특별한 이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주어진 일에 성실한 군인이었다. 그렇다고 아이히만이 흉악하고 냉혹하거나 또는 정신이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모범적인 장교라는 사실 앞에서 아렌트는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고 평범한 형태로 일어나는가를 깨달았다.

아이히만에게서 나타나는 악의 평범함은 곧 생각의 무능함이다. 그는 분명 어떤 개인적인 ‘사심’도 전혀 없는 근면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누군가가 600만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으로 악명 높았던 독일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관했다. 이 경험으로부터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나왔다. 악의 평범성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평범하

한 마음’에서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는 텅 빈 그런 순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주어진 권력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렌트는 생각의 무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생각을 포기하면 필연적으로 말하기의 무능함도 함께 온다. 그리고 말할 능력이 없으면 곧 판단의 무능함으로 이어진다. 이 ‘순수한 마음’이 다름 아닌 세 가지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무능함은 신의를 지키며 결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은폐되고 이용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무능과 악은 서로를 동반 주고 의지하면서 재생산된다. 생각과 판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공허하며 위험한 이이다.

악의 평범함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악은 늘 우리에게 곁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면서, 이 시대의 무능과 무력의 광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아닐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참담함이 더 깊은지도 모른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인간의 기억과 수사



박 해 연  
광주지검 검사

“마인드스케이프”란 영화를 보면 특수한 장치를 통해 타인의 기억에 접속해서 사건의 단서를 찾는 수사 방법이 나온다. 수사관은 타인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기억을 마치 동일한 시공간이 존재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사기법은 안이다.

검사도 처음 임용이 되어 피의자, 피해자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

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기억하는 게 모두 다를 수 있지?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리학 관련 서적에서 인간의 기억은 조작,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험자는 피실험자들에게 텅 빈 거리에 복면을 한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여주고는 “그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후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다고 기억했다고 한다. 물론 남자는 복면을 쓰고 있었다. 기억이 왜곡된 것이다.

‘오래 전의 일이거나 일상적으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때가 경험했던 일인데도 전혀 다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고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지?’라며 한동안 혼란스

러워했던 기억도 있다.

인간의 기억을 완전무결하게 그대로 저장하는 장치나 타인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장치까 개발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현재 그가 기억하는 바에 의해서 사건의 실체를 좇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불만해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기억은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일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을 남겨두고 선별적으로 지워나간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도 나에게서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라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여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놓쳐버렸지만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곤란한 경험을 해 본 적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

서 인간의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증거들도 확보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한다.

특히 피의자가 부인하면서 억울해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더욱욱 피해자의 기억 외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10년도 훨씬 전에 발생한 절도, 성폭력 사건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재검정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조적되거나 왜곡된 인간의 기억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기 고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하려면



김 호 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사랑알리미’ 3기 회장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바람이 거세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같은 생활권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여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살자는 먹거리 경제 활동이다. 농촌공동체 붐과, 지역 소농해체, 식문화와 종자 확일화, 밥상안전 위협, 장거리 이동에 따른 지구환경 파괴 등 먹거리 세계화가 낳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로컬푸드에 단계적으로 접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했다.

전국에 약 1만7000여개 직매장을 운영(최대 편의점 매장 수 보다 많다)하고 있

는데 유형은 크게 정부주도형, 농협·생산자단체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완주군에서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103곳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40개로 확대하고 내실화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 농식품 산업 분야 정책 중 하나로 ‘유통구조 개선’이 포함됨에 따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농협은 물론이고 대형마트까지 로컬푸드 추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추세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남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도 12개의 로컬푸드 매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은 일부 지자체와 농협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에다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단지 등을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식이나 농민장터 등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22개 시·군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 및 농협 주체가 된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 지원이나 협력 체계 구축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직 민간의 주체도 준비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시·군도 존재한다.

농협 주도의 로컬푸드 확산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농림식품부의 농사랑알리미 감사인 필자가 목포시 및 신안군 등의 농협과 대학교,사회복지관, 소비자교육연맹 등에서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 전체의 86%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방증의 하나다.

반면, 로컬푸드 운동 취지에 대해서는 84.6%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활성화 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

는 로컬푸드 매장이 거주지역에 개설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0%나 됐다. 특히 도내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로컬푸드 사업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95%가 찬성, 청소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푸드’는 수입개방의 외풍에 맞서기 위한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회복 전략이기도 하다.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과 소비자들의 뒷받침이 필요충분 조건이다. 또한, 소농으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베이비붐 세대를 귀농·귀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촉매제이기도 하다.

전남도와 지자체들도 하루빨리 도민 열망과 세계화 외풍에 맞닥뜨린 농·축·어업인들의 어려움 해소, 그리고 도민 먹거리 안전확보 대안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농사랑알리미 감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로컬푸드운동이 정착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社 說

최순실 국정농단 들끓는 민심 수습하려면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대규모 촛불 시위가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들끓는 민심의 심각성은 촛불 시위 참가자가 하루 2만 명이 넘는다는 것과 함께 ‘대통령 퇴진’이나 ‘대통령 하야’ 등의 피켓 문구에서도 읽을 수 있다. 외신들도 박근혜정부 최대 위기라며 연일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정 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도피성 출국 57일 만에 귀국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부터 최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립적인 거국내각 구성이란 목소리가 높다.

우선 검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 원대 자금 모금과 이 들 제단의 사유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국방·외교·경제 등 기밀문건 사전 열람, 그리고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이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문서의 출처인 청와대에 대한 조사 병행이 필수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명령 집행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청와대의 협조 없이 검찰이 주는 자료만 받아서야 어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판국에 국정 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도피성 출국 57일 만에 귀국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부터 최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립적인 거국내각 구성이란 목소리가 높다.

우선 검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 원대 자금 모금과 이 들 제단의 사유화, 대통령 연설문 등

김영란법 한 달...청탁 근절 자리 잡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다차페이(각자 내기) 등 변화의 바람은 시행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청탁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에매한 기준 때문에 시행 초기 극심했던 혼선은 점차 안정돼 우려했던 사회 혼란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관련 내용 위반 신고는 전남에서만 2건이 있었을 뿐 광주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음식업계와 회회 업계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아예 문을 닫는 식당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급 한정식집의 경우 3만 원 미만의 메뉴를 만들어 대비했지만 매출은 이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와 인삼(홍삼)의 가격과 매출도 동시에 뚝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축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구성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법령 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공동체 구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수산 분야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음식업 등 서민들이 입을 매출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 等 鼓

명성황후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성난 민심을 피해 충주로 피신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당이 찾아온다. 무당이 환궁 날짜를 점쳐 줬는데 들어맞았다. 명성황후는 이 무당을 데려와 ‘진령군’으로 봉하고 극진히 예우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의 정치 파트너는 정부 대신이 아닌 무당이였다. 진령군은 자유롭게 왕궁을 드나들었고, 수시로 임금과 왕비를 알현할 기회를 가졌다. 각

광해군은 자신을 폐위시킨 인조반정이 발발하기 전 역모에 관한 상소를 받는다. 하지만 김개시가 역모 주모자로 거론된 김자점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역모를 꾸밀 리 없습니다”(광해군 일기)라고 보고하자 임금은 의심을 거둔다. 이 같은 거짓 보고는 김개시가 반란의 조짐을 미리 인지하고, 역모 세력인 김자점 등과 사전에 결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정 후 김개시는 참수된다.

국정농단 여인들

총 국가 업무가 진령군의 뜻에 따라 이뤄졌고, 진령군의 힘을 빌리면 안 열리는 벼슬길이 없었다고 한다.

광해군 때도 국사를 쥐락펴락했던 여인이 있었다. 선조 때부터 총애를 받았던 김개시(개봉을 음차한 이름)는 이름에서 보듯 천민 출신이었다. 세자 시절부터 광해군을 보필해 온 김개시는 왕의 기분을 누구보다 잘 맞췄고, 그로 인해 임금의 눈과 귀 같은 역할을 했다. 왕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을 일삼던 그녀는 정치권력은 물론 후궁들까지도 눈치를 보는 실세였다.

정치가 공적 조직이 아닌 사적(비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대표적 사례이다.

최순실의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하는 수 없이 대통령도 최 씨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화체육부 등 최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인사나 각료들은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경호 실패와 국가 정보의 유출을 막지 못한 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알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의 공모자이자 부역자이니 말할 것도 없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